

#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에 원화 급락… 한은 ‘빅스텝’ 무게

## 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 기준금리 격차 다시 벌어져  
“국내물가 등 검토 후 인상폭 결정”  
내달 14일 금통위서 빅스텝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번 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우리나라로도 ‘빅스텝(0.5%p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미 간금리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 2.50%인 우리나라에는 오는 10월 14일과 11월 24일 두 번의 금리결정을 남겨 두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원화값은 급락했다.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선 마저 뚫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전제조건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준금리 인상폭



추경호(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 FOMC 주요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장관, 김주현 금융위 원장.

며 금통위의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가장 큰 변화 전제조건은 주요국 특히 미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로 기준금리가 4%대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한 달 새 바뀌면서 4%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최종 기준금리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는 금통위원회와 상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에 달려화 대비 원화값이 급락했다. 이날 서울외 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1394.2원)보다 15.5원 오른 140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된 질의에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심리가 확대되는 추세다.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추가 빅스텝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가 바뀌었다”며 “이로 인해 물가등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검토해서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미 연준은 20~21일(현지시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2.25~2.5%에서 3.0~3.25%로 0.75%p 인상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정례회의 직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목표치인 2%대 달성을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며 “오늘과 같은 큰 폭의 금리인상이 또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연준이 지속해서 큰 폭의 금리인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FOMC 위원들의 금리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월 3.4%보다 1.0%p 높아진 수준이다. 내년 말 금리 전망치도 4.6%로 6월 (3.8%)보다 0.8%p 올려 잡았다.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스텝에 나서

## 한전 “사채발행 한도 2배 → 8배 늘려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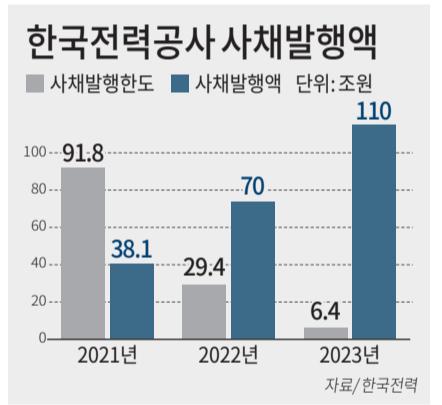
지난달 회사채 잔액 54조 넘어서  
채무불이행 위기에 ‘법 개정’ 주장  
불발땐 ‘전력생태계 붕괴’ 분석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등 급격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누적된 적자와 회사채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이자, 한전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경제〉가 22일 단독 입수한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관련 한전법 개정 필요성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급격한 당기순손실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전력법 제16조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제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8배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한전은 회사채 8배 확대에 대한 한도 조건 단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의 재무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회사채 잔액만 54조원이 넘는다. 한전은 상반기에 11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20조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2021년도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1㎾h(킬로와트시) 당 94원, 판매단가는 1㎾h 당 108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1㎾h 당 169원, 110원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전은 하반기에도 높은 에너지가격이 지속되며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전법 16조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의 두 배로 회사채 발행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년엔 당기순손실로 인해 회사채 발행액이 급증해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내년도 추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할 시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

전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2023년 5조 4000억원, 2024년 8조 2000억원, 2025년 9조 3000억원이다. 한전은 회사채를 들여오지 못해 전력거래대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한전은 전력거래자격을 상실하고 이는 전력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향후 5년간 14조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출자지분, 해외사업,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 1조 5000억원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 설비투자 조정 2조 5000억원 ▲제도개선 및 고강도 긴축경영 추진 2조 3000억원 ▲고객부담금 현실화, 할인제도 조정 등 1조원 ▲장부상 저평가된 토지의 재평가를 통한 실질가치 반영 7조원 등을 재무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라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폐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

» 1면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서 계속

특히 수소차의 경우 수소충전소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는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로 ‘넘비’ 현상이 남아있는데다가 기술적으로 국산화 비중이

낮다”며 “수소충전소 설치 부담을 낮추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맞춰 배터리 분야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 법안 발효로 세계 배터리 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

위로 떠오른 폐배터리 재활용은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배터리 원재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급망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친환경 원료, 소재를 만들 때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 이는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IRA, 한미 협력에 부정적… 조속 해결을”

이창양 장관, 美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 제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자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러먼도 미 상무장관을 만나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 정부들이 한미 양국 협력기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추후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산업부는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획해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C 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미

측이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앤라배마주의 배리 무어(Barry Moore, 공화)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조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